



한양대학교 노동조합

노동자의 행복과 보람 그리고 상호 존중의 제19대 한대노조 제19-044호 2021. 3. 23.

Tel. 02-2220-1600~1
Fax. 02-2220-1602
URL. http://labor.hanyang.ac.kr
Email. nojo@hanyang.ac.kr

정책연대-박주민 의원 간담회 내용 보고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는 지난 3월 18일(목) 오후 5시, 국회의원회관 608호에서 박주민 의원 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정책연대를 대표하여 김태훈 회장(광운대 노동조합 위원장)과 본교 신남호 위원장, 건국대 조병철 위원장이 참석하였다. 정책연대 현황과 주요 활동을 간략히 소개한 후, 박주민 위원에게 대학의 위기 타개 및 사립대학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다음과 같이 대학사회의 요구와 현실을 전달하였다.

- 1. 2009년 이후 12년째 지속된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모든 대학이 재정적 위기를 맞이하고 성장 동력을 상실한 채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다. 등록금 동결 기간 동안 대학 직원·교원의 임금과 처우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으며 일자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등 대학사회의 노동 조건이 전반적으로 후퇴되었다. 특히 대학의 직원은 국·공립·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업무를 부여받고 있으나 별도의 보상은 커녕공무원, 교원에게 주어지는 휴직(육아휴직 포함) 및 수당에서조차 차별을 받고 있다.
- 2.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대학에게 씌워진 등록금 프레임을 벗 기고 대학 재정의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국고 사업비 사용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여 대 학이 각자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 직원의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들도 고용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연대에서 제안한 바 있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조세 특례법 개정'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
- 3. 사학을 위한 국가의 투자와 학생의 등록금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도록 사학에 대한 감사와 처벌도 함께 강화해 사학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켜야 한다. 사학의 비리는 이사장 혹은 재단 고위 인사들의 횡령, 배임, 오판에 의해 일어남에도 현재의 제도는 사학 범죄자들이 다시 재단 경영에 복귀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재단의 위법·불법 행위가 있을 시 관련자의 직계 가족까지 대학 경영에 다시 관여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의 투명성, 합리성, 민주적 결정권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평의원회 권한 확대, 개방 이사 선임 시 재단 개입 최소화, 노동 이사제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간담회를 끝맺으며 고등교육의 발전을 논의할 때 대학 구성 주체 중 하나이며 대학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박주민 의원도 관련 법률 개정, 정책 입안 등의 활동 시 대학 직원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과의 간담회 자리를 추가로 마련하는 등 가교 역할에도 힘쓰겠다고 화답하였다.